

지방화·세계화와 지방의 역할증대

김동완 / 행정자치부 재정과장

21세기 초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주변은 세계화라는 도도한 물결이 지방화·분권화와 함께 지방의 대응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60~7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해야 했던 만큼 어려운 과제로 다가설 것이다.

최근 참여정부 하에서 지방분권이 국정 과제로 채택되어 추진되면서 세계화는 우리들 관심에서 다소 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서민생활의 근거지가 되었던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가 문을 닫고 주식시장에서는 매일 외국투자자들이 매수하느냐 매도하느냐에 따라 주가가 변동하는 것은 그만큼 세계화가 우리들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년 초 전라북도에서 발주액 기준으로 244억원 이상의 국제입찰대상을 국내입찰에

불인 일이 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민원협조 차원에서 전라북도에 국제입찰에 부의하도록 구두 권고를 하였다. 아마 전북에서도 지역업체의 입장과 계약관련 법규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이 국내입찰을 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입찰일 하루 앞두고 미국계 회사에서 강력한 항의가 제기되어 지방재정법규를 검토한 결과, 행자부장관은 전북지사의 입찰을 직권 중지해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법에 이미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국제입찰에 해당하는 경우는 2002년 기준으로 19건 정도 밖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조항에 대한 업무연찬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행자부가 전복의 입찰을 직권중지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마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에 수입되는 한국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WTO에 제소하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이 경우 우리 경제는 문제가 없는가? 우리 경제의 약 80% 정도가 해외의존도를 갖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세계화의 추세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갈 때만이 지속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우리 사회를 부지불식간에 휘감고 있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과 FTA(Free Trade Agreement)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체결된 한·칠레FTA가 농민단체들과 노동단체들의 국회 비준 반대로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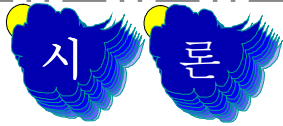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한국이라는 시간적·공간적 개념을 벗어나 전 세계가 하나로 압축되어 가면서, 한편으로는 세계적 표준(Global Standard)에 맞춰 치열한 경쟁에 참여하여야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브랜드의 정체성(Identity of Brand)을 잃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색깔을 가지고 그 독창성과 창의성을 상품화하여 세계적 브랜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어쩌면 우리나라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했던 것만큼 어려운 지방분권의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사례 하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0년 전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가 WTO체제로 전환되는 시기에 전국이 온통 혼돈에 빠졌던 경험에 있다. 일찍이 대비를 해오지 못한 정부에 대한 비난과 함께 협상에 참여하고 있던 대표단의 무능력까지 성토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국내뉴스는 ‘정부가 이미 예정되었던 농업개방추세에 사전대처하지 못하였다’는 비난으로 모아졌고 농민단체들은 전국 규모의 집회·시위를 추진했었다. 이에 따라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서울로 향하는 농민들을 막아 세우고 ‘참자. 이제라도 정부가 적극 대처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무작정 데모만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하며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전국에서는 농민회가 구성되었고 급기야는 서울로 상경하여 전국단위 집회 및 시위로 연일 떠들썩했다. 필자도 금산군에 근무하면서 서울로 상경하려는 농민들을 붙잡고 또는 버스를 가로 막으며 WTO체결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가운데, “이제라도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다고 하니 일단 참자”고 설득했다.

이제 그 10년이 내년으로 다가왔다. 이를 위해 우리는 쌀에 대해 10년간 국내쌀 소비량의 4%만 할당제로 수입하는 『관세화유예조치』를 할 수 있도록 양허를 받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특세를 신설하여 40조원 이상의 정부예산을 농업부문에 투자하는 장기계획을 확정·발표하여 시행한지가 10년이 넘어가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였는가? WTO 협상체결 이후 농업의 세계화 추세에 적응



할 수 있는 10년이란 긴 시간을 농민들의 전국규모 시위와 정부와의 협상이 반복되면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 버렸다. 결국 농민들은 농가부채에 휩싸였고 외국에서 우리의 공산품에 대한 보복위협이 예견되고 있다. 어렵더라도, 다소 정치적으로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미리부터 대비하고 설득하는 유비무환의 지혜를 우리가 또 다시 잊고 현실문제 해결에 급급하게 살아온 탓일 것이다.

금년 초 당초 계획에 따라 2004년도 쌀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화조치로 전환되기에 앞서 취해진 정부의 『쌀 수매가 인하』가 최근 우리 사회에 태풍의 눈으로 엄습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쌀 소비량의 4% 정도 수입되었던 외국산 쌀은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쌀 음료수나 쌀과자, 쌀라면 등 가공식품으로 제조되어 사실 국내 쌀값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004년이면 관세화 유예조치가 끝나기 때문에 농림부가 그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WTO의 도하개발협정(DDA)에서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외국산 쌀은 일정율의 관세를 지불하고 수량에 제한 없이 한국에 수입될 수 있다.

그러면 외국의 쌀 생산단가는 얼마인가? 상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중국 만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나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우리 국내산과 비교할 때 맛에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가격은 20% 수준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세화 유예조치 조항의 기한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 수입쌀에 대한 관

세는 어림잡아 500% 정도 부과해야만이 국내산 쌀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만일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쌀에 대해 관세를 400%~500%를 부과한다면 중국이나 미국에서 한국의 다른 상품에 대해 얼마의 관세를 부과할 것인가? 그래도 우리 경제는 괜찮을까? 그렇다고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농업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쌀농가의 도산이 속출할 것이다. 현시점에서 보면 우리는 참으로 진퇴양난의 질곡에 빠져 버린 것이다.

이러한 교훈은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현시점에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한다. 현실에 나타나는 작은 문제점을 두려워 해 정책의 기본방향을 잃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크게 후회하게 된다는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한다.

따라서 이제 세계화와 병행하여 지방화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신속성있게 대응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브랜드의 정체성(Identity of Brand)을 널리 알려 분명한 비교우위 영역을 가져야 한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는 모토는 세계화와 지방화의 시대에 자치단체가 경쟁의 주체로서 적자생존할 수 있는 전략이다.

21세기 초 WTO를 중심으로 세계경제는 무한경쟁의 체제에 도입하였다. 세계시장이 단일화되고 특히 사이버마켓이 널리 보급되면서 세계경제는 이제 2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세계최고의 상품만이 세계를 제패하고 성장하는 시스템이 발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조류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러한 비교우위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21세기 무한경쟁의 주체로 나서야 하며, 기본적 틀은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적 추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너무 세계화만을 추구한다면 지역은 세계시장에 잠식당하고 오로지 코카콜라와 맥도날드 등만이 존재할 것이고 그렇다고 지방화만을 추구한다면 북한과 같이 ‘우리는 우리식대로 살겠다’는 국수주의에 빠져 침체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

체가 추구해야 하는 숙제는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우리가 지난 40여 년간 경제성장과 민주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쫓아야 했던 것과 비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은 중앙정부의 규모를 줄이고 지방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지방의 가치가 중앙의 규범과 판단기준에 의하여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히 세계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지방분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이요 꿈이다. 🍷



